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법 논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후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에 눌려 허겁지겁 통과시켰다니, 국회의원은 자신이 피해 나갈 구멍을 마련했다니, 언론인과 사립교원까지 포함하여 물타기를 하였다니 말들도 많다. 나아가 이 법은 '검찰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언론의 자유와 서비스업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논조도 나온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 아니며,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고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등 원안보다 약화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어쩌랴. 김영란법의 큰 줄기는 희미해지고 잔가지만 어지럽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 국민은 어지럽기만 하다.

지금도 국민은 어이없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검사가 벤츠를 선물 받았는데 대가성이 증명 안 된다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업무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의 등장과정과 그 논의들을 보면서, 한국의 공직 엘리트 계층의 부실함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시리다. 세월호 침몰이 한국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그대로 표출했듯이 김영란법은 공직 엘리트 계층의 비도덕성, 무도덕성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없어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영란법이 나왔는

가? 그렇다면 공직 엘리트끼리 합작하여 그 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더 강한 법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생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듯이, 수많은 격랑 속에서도 오백년 이상 이조왕조를 유지시켜온 여러 원인 가운데 '청백리' 정신을 포함시키는 학자가 있다. 조선왕조는 청백리 선발을 제도화 하여 그 정신을 선양하였고, 청백리를 배출한 가문은 큰 명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청백리 정신은 바로 공직윤리를 의미한다. 지금 무너진 공직윤리를 김영란법으로 세우려는 것인가? 바르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바탕을 둔 사회윤리적 차원이다. 이들의 관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문제는 개인윤리적 차원과 사회윤리

적 차원을 어떻게 중도적 입장에서 통합 시키느냐이다. 중도는 결코 가운데가 아니다. 양면을 잡고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오늘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사람의 행위를 점점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사람이 사람 가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올리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점점 죽어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아하! 붓다는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았는가. 남을 탓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한국 불교는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교의 정토사상과 보살정신이 지금 이사회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가? 화두는 선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해인사·동국대는 한국불교의 '거울'

3월 9일부터 시작된 한주는 매일 사건이 이어졌다. 3월 9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정련 스님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직무대행으로 이사장 영담 스님을 지명했다. 총장 선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던 이사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사태는 건잡을 수 없이 흘렀다. 영담 스님은 스님대로 직무대행 역할을 할 것을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인수 요청을 해왔다. 여기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동문으로 구성된 범대위가 가세해 일면 스님의 출근 저지를 선언하고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일면 스님 측도 3월 12일 새벽 2시경 출근을 강행하며 범대위 측과 갈등을 빚었다.

3월 7일 원각 스님이 추대되며 마무리될 줄 알았던 해인총림 방장 선출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전환됐다. 해인사 선거관리위원장과 일부 스님들이 11일 "산중총회 구성원 중 미등록 법인 임직원과 도제가 있어 원천 무

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원각스님 추천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장 추대는 선거가 아닌 추대이기 때문에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인사는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이 선종을 드높이면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성지와 같은 곳이다. 동국대는 미래 한국불교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대 선지식들이 만든 종합대학이다. 해인사와 동국대, 두 곳은 한국불교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그 '거울'에 비친 한국 불교의 모습은 어떤가.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복잡한 정치적 프레임만 남아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결집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여론 조사가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의 신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관심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모습은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학 불교 동아리에 관심이

졸업 시즌이 끝난 3월은 각 대학마다 새내기 신입생을 맞나라 분주하다. 예전같으면 동아리 선배들이 캠퍼스 곳곳을 찾아가 신입회원들을 모집 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작금의 대학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대학생 동아리에 발길이 뜸 끊겼다 한다. 쓸쓸한 일이다. 한때 동아리 활동은 대학입시의 중앙감에 찌든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 낭만의 마당이었다. 진정한 자아성취와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재미 또한 대학생들만의 특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로 몰입한다 고사하고 정규직을 훔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 아닌가.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건 이해된다. 이

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동아리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와 같은 종교 동아리들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현실속 고군분투하는 대불련 회원들의 열정에 우선 등을 두드려 주고 싶다. 새학기 개강을 맞아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생회와 연합해 서강대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펼쳤다.

대학생 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좌절 말고 머리를 맞대 큰 꿈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대불련 산하에 있는 가톨릭대, 고려대, 광주대, 대전대, 동국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전국 40여개 지회가 3월 한 달 동안 캠퍼스 포교·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니 젊은 청년들의 포교 열정에 큰 기대를 해 본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로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가 3월 11일 한반도평화 통일불교실천기획단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에 쓴소리를 했다. 그의 말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우승열패' 논리만 득실한 '격차왕국'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

한국은 적자생존,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사회다. 100년 전과 같은 구조다. 다음을 통해 이를 확실시 할 수 있다.

한국은 10대기업이 총국민생산의 약 84%를 차지하지만 유휴 세율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6% 안팎이며 참고로 유럽연합의 평균 기업세율은 26%다. 2003년만 해도 10대 기업의 GNP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10대 재벌들의 총고용 비율은 약 6%에 불과하며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착취를 강행한다.

재벌의 힘이 강해지면서 판로집단과 함께 지배 블록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판교야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세월호 학살 사건이지 않은가. 기업이 행정조직까지 움직여 공공이익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서열차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서열이 사실상 '대입'에서 정해지며 그 뒤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즉 한국 사회는 초기선발형 사회에 속하며 초기 선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교육 비용을 대줄 부모의 경제력이다.

한국의 1%부자가 57%의 부동산 가치를 독점하는 반면 약 60%의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못해 실직 때 사실상 기본생계 보장조차 불가능하다. 소득 상위 10분위와 하위 1분위의 일반소비 격차는 약 4배, 사교육비 소비 격차는 16배나 된다. 격차왕국 대한민국의 사회격차 수준은 이미 남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카스트 제도로의 퇴행을 의미할 뿐이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1.7명밖에 안돼 프랑스(3.4명) 등 유럽 복지 국가보다 약 2배 낮다. 공공의료기관 비율 역시 10%도 안 된다. OECD 평균 7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직도 빈곤층과 중산층, 하위계층 등은 공공부문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적 이유로 인한 전

국 성인들의 미치료율은 34%에 달하며 치과의 경우 45%다. 즉 전국 총인구 약 20~40%는 의료소외층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살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은 하루 36명꼴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자살비율은 세계 3위에 육박한다. 시형, 성직, 취직, 실직, 경제적 불안, 미래 전망 부재가 원인이다. 노동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자

취업자들의 도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할인점 등으로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당한 영세업자는 생계 곤란, 자살 위험에 빠지고 있다. 위험 사회로서의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산재 공화국 한국의 2008년 재해피해자는 20만명에 사망자는 2422명이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보다 4배나 많고 영국보다 21배나 많다. 그러나 이 통계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만을 한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 노동자 및 외국 노동자의 재해사고는 포함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약자층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노동에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 역사에서는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운동의 압박을 받아온 건한

개혁이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그랬고 2008년 촛불 집회 등이 그랬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감각은 커다란 위엄성을 내포한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실패될 경우 이같은 사회적 대량 타살들은 앞으로도 재발될 우려가 크다.

변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파업투쟁과 중산층의 시위투쟁, 불매 운동 등이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 복지-공공성 위주 국가로의 전환 전제조건은 노동계급과 중산계층들의 강력한 진보연대와 공동투쟁이다.

불교의 원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을 뜻하는 말이다.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원력이 필요한 때다.

평등을 통한 이상적 사회를 강조한 <아함경>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곧 부의 재분배와 상통한다. 기업세를 비롯한 양도세, 증부세 등을 강화시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투자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부양책 역시 토건 예산이 아닌 복지 예산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On-Heat Relief' (온열복대) featuring a heat pad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like back pain and muscle tens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ailments it treats.